

최근 인도의 외국인투자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혜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hwjung@kiep.go.kr, Tel: 3460-1092)

차 례 ● ● ●

1.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동향
2. 원인 및 배경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인도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 자금지원 확대, 부정부패 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인도정부는 2012년 들어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인도 증시투자 허가, 단일브랜드 소매업 전면 개방, 외국계 항공사의 인도 항공사 지분참여 허용, 디지털 케이블 TV 분야 외국인투자 상한비율 확대, 모바일머니 시장 전면 개방 등을 연속해서 발표함.
- 또한 2008년부터 4년간 진행된 영국 보다폰의 자본이득세 부과 취하 소송에서 인도 대법원은 2012년 2월 보다폰에 승소판결을 내려 외국인투자자 보호 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2012년 3월에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인프라채권펀드가 출범함.
- 한편 인도 대법원은 2012년 2월에 2008년 당시 경쟁입찰 없이 임의로 발급되었던 2G 통신사업권을 불법으로 판정, 취소시켰으며, 2012년 3월 인도 국방부는 뇌물수수 관련 외국업체를 적발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함.
- ▶ 최근 인도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경기 둔화를 저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도 경기는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11년 3/4분기에는 최근 3년간 최저치인 6.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이러한 경기둔화는 인도정부의 고금리 정책 때문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인도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정책 강화를 통해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 ▶ 인도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최근시장이 개방되었거나 곧 개방될 부문에 대한 선제 투자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 또한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 크게 부진한 대인도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순위와 비중은 14위와 0.6%인 데 반해 싱가포르와 일본은 각각 2위와 10.1%, 3위와 7.6%임.
- ▶ 단, 최근 인도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바, 대인도 투자진출을 적극 도모하되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1.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동향

- 인도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 자금지원 확대, 부정부패 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음.

가. 시장개방 확대

- 인도정부는 2012년 1월 1일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인도 증시투자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함.
 - 그동안은 외국인 기관투자자(FII)와 해외거주 인도인(NRI: Non-Resident Indian)만 증시에 투자할 수 있었고, 외국인 개인투자자는 FII를 통해 투자해야 했음.
 -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투자 상한비율은 납입 자본금 대비 투자자 개별에 한해서는 5%, 이들을 합한 투자자 전체에 대해서는 10%로 책정됨.
- 인도정부는 이어서 2012년 1월 10일부터 단일 브랜드 소매업¹⁾ 시장을 전면 개방함.
 - 2006년 2월 이후 51%까지만 허용되어 왔던 단일 브랜드 소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소유 한도가 100%로 전면 확대됨.
 - 단, 외국인투자 지분소유가 51% 이상일 경우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최소 30%를 조달해야 함.
- 또한 2012년 3월 인도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은 복수 브랜드 소매업²⁾ 분야도 개방한다는 의지를 피력함.
 - 인도정부는 복수 브랜드 소매업 분야 외국인투자 지분소유 한도를 51%까지 허가한다는 계획을 2011년 11월 밝힌 바 있으나, 야당 및 일부 연합정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음.
 - 하지만 인도 상무부 장관은 2012년 3월 12일 개최된 국제식품서비스업 박람회에서 복수 브랜드 소매업 분야가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이며, 특히 인도의 열악한 식품저장, 식품안전, 냉동체인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1) 단일 브랜드하에서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소매업을 뜻함.
2)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소매업을 뜻함.

표 1. 인도 소매유통업 외국인투자 규제 현황

부문	외국인투자 상한비율	인가 규정
캐쉬앤캐리* 및 도매업	100%	자동인가
중소기업에서 조달된 상품 거래	100%	정부인가 필요
단일 브랜드 소매업	100%	정부인가 필요
복수 브랜드 소매업	비허가	허가 검토 중

주: * 구매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직접 가져가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창고형 도매유통업.
자료: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Report(2011).

- 2012년 2월 초에는 그동안 금지되어 온 외국계 항공사의 인도 항공사 지분참여 허용계획이 발표됨.
 - 인도정부는 항공연료비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2011/12년 약 30억 달러 적자 예상) 항공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련 시장을 49%까지 개방함.
 - 그동안 인도 국내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참여는 항공사가 아닌 외국기업에 한해 49%까지만 허용되었음.
- 또한 2012년 2월 인도 정보방송부는 디지털 케이블 TV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상한비율을 74%로 일괄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현재 이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상한비율은 플랫폼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치로 케이블 TV와 DTH(Direct-To-Home)에 대한 외국인투자 상한비율이 49%에서 74%로 늘어날 예정임.
 - 인도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40억 달러 상당의 자본투입이 필요한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표 2. 인도 방송산업 외국인투자 규제 현황

부문	외국인투자 상한비율	인가 규정
케이블 TV	49%	정부인가 필요
DTH(Direct-To-Home)*	49%	정부인가 필요
HITS(Headend-In-The-Sky)**	74%	외국인투자 지분 49% 이하 자동인가
모바일 TV	74%	자동인가
IPTV***	74%	자동인가
FM 라디오 및 콘텐츠 제공업체	26%	정부인가 필요

주: * 위성방송을 각 가정에서 직접 수신하는 방식.
** 위성을 통해서 케이블 TV 시스템에 디지털 TV 채널을 제공하는 위성 멀티플렉스 서비스.
***광대역(broadband) 연결 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료: 인도 상무부, 보도자료 종합.

- 인도 모바일 머니 시장도 전면 개방될 예정임.
 - 모바일머니 결제 서비스 개방을 위해 인도정부는 2012년 3월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비(非)은행금융 기관 서비스 항목에 비은행 지불 시스템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힘.
 - 외국인투자자에게 전면 개방될 모바일 머니 결제 서비스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불수단인 모바일 지갑, e-지갑 등이 포함됨.

나. 투자자 보호 및 자금지원 확대

- 2012년 1월 20일 인도 대법원은 영국 이동통신업체 보다폰(Vodafone)의 자본이득세 부과 취하 소송에서 보다폰에 승소 판결을 내림.
 - 인도 세무당국은 2007년 보다폰이 홍콩의 통신회사 허치슨 왓포아 그룹의 인도 자회사인 허치슨 에사르를 11억 달러에 인수한 것에 대해 자본이득세 25억 달러를 부과하였으나 보다폰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음.
 - 2008년부터 약 4년간을 끌어온 본 소송은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인도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외국 회사간 거래로 인도 세무당국에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하였음.
- 또한 인도정부는 2012년 3월 인프라 사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채권펀드(Infrastructure Debt Fund)를 출범시킴.
 - 인프라채권펀드는 인도 민간은행인 ICICI 은행, 바로다 은행, 외국계 은행인 시티그룹, 인도생명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1년 이상 진행된 정부민간합작(PPP) 인프라 사업에 투자 지원하게 됨.

다. 부정부패 척결

- 2012년 2월 2일 인도 대법원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정보통신부가 공개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발행한 122개의 2G 주파수 허가 발급을 불법으로 판정,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경쟁 입찰을 지시함.
 - 인도 대법원은 허가가 취소된 업체들에 4개월 안에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지시하고, 정보통신부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2G 주파수 허가를 재발급하도록 지시함.
 -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해당업체들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 척결³⁾과 법제도의 투명성 강화로 인도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2년 3월 인도 국방부는 3년 전에 방위산업 당국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업체를 포함한 외국업체 4개 등 6개 방위산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향후 10년간 방산 관련 입찰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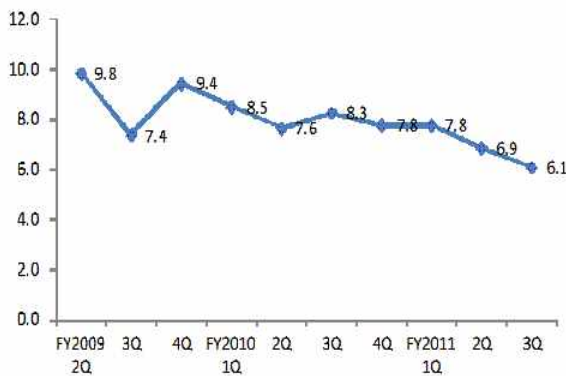
3)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어니스트&영이 500명의 글로벌 CEO들을 상대로 실시한 2012년 인도매력도조사에 따르면, 투자지로서 인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60%의 응답자가 응답함.

2. 원인 및 배경

- 최근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은 인플레이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경기 둔화를 저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도 경기는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11년 3/4분기⁴⁾에는 최근 3년간 최저치인 6.1%의 성장률을 기록함(그림 1참고).
 - 2011년 12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1.8%로, 전년동기 8.1%에서 6.3%포인트 하락함(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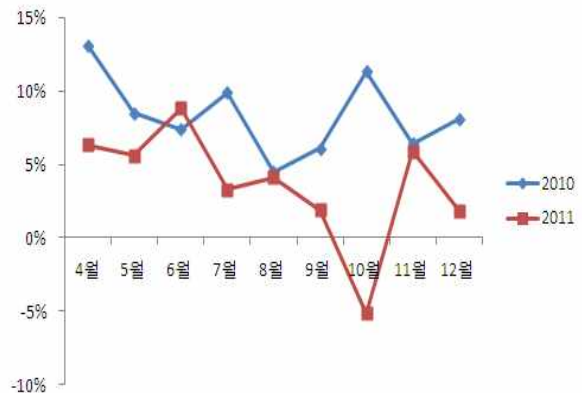
그림 1.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CEIC.

그림 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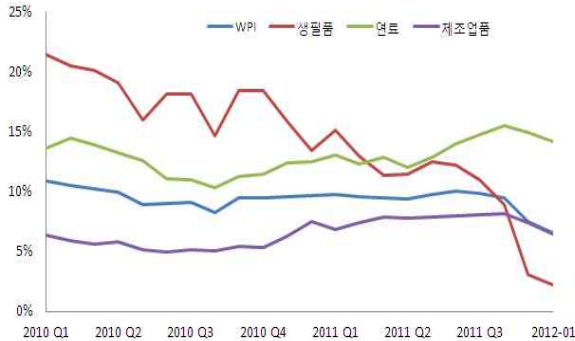


자료: 인도 재무부.

- 이러한 경기둔화는 인도정부의 고금리 정책 때문이지만 인플레이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인도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음.
 - 인도중앙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물가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1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75%에서 8.50%까지 무려 3.75% 포인트나 인상시킴.
 - 이에 따라 한때 10% 이상을 기록한 도매물가 상승률이 2011년 9월부터 둔화되어 2012년 1월 6.6%까지 낮아졌지만, 이는 인도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어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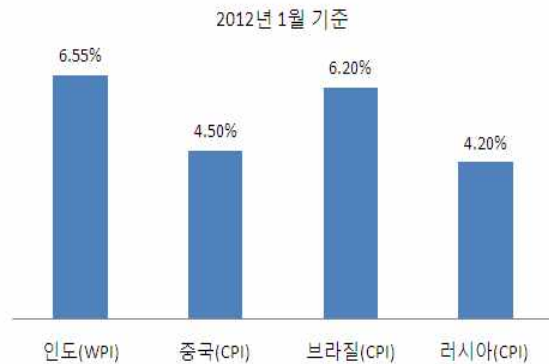
4) 인도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익년 3월 동안이며, 이에 따라 3/4분기는 10~12월을 의미함.

그림 3. 분기별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CEIC.

그림 4. BRICs 국가간 인플레이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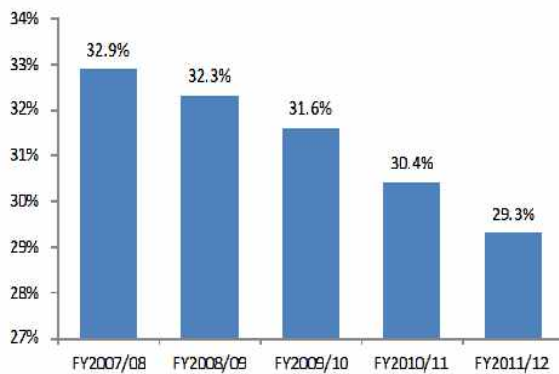


자료: EIU.

■ 실제로 지난 2년간 강행된 긴축통화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제외한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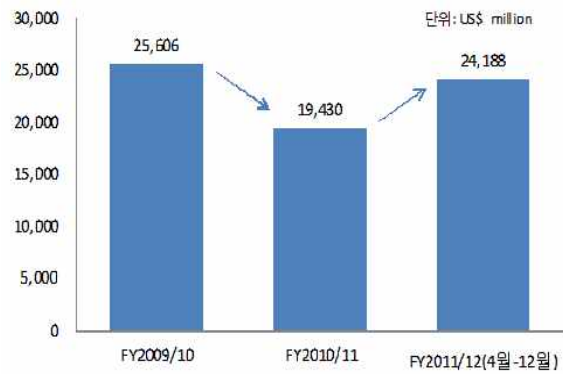
- 2008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투자증가율이 둔화되어 GDP 대비 투자율이 2007/08년 32.9%에서 2011/12년 29.3%로 낮아짐(그림 5 참고).
- 긴축정책으로 민간 및 정부 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11년에는 감소하였지만(-24%), 2011/12년에는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한 약 242억 달러를 기록함(그림 6 참고).

그림 5. 연도별 GDP 대비 투자율



자료: Economic Advisory Council to the Prime Minister.

그림 6. 연도별 FDI 유입 추이



자료: 인도 상무부.

■ 이처럼 정책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인도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보다 시장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부정부패 척결 등 친(親)외국인투자정책을 강화하여 부진한 투자를 만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

3. 전망 및 시사점

■ 경기둔화와 인플레이 및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겹쳐 마땅한 정책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인도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2012~17년) 준비보고서(Approach Paper)에서 2006/07년 이후 급증한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많은 외국인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함.

- 2012년 3월 중순 발표될 2012/13년 예산안에도 친외국인투자 정책이 포함될 것을 인도정부는 시사함.

□ 특히 인프라, 노동집약적 산업, 냉동보관 및 물류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포함될 예정임.

- 또한 인도정부는 세계경제포럼의 인도경쟁력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3대 취약요인인 열악한 인프라,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최근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최근 시장이 개방되었거나 곧 개방될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단일 브랜드 소매시장의 완전 개방은 복수 브랜드 소매시장 개방의 전조로 볼 수 있는바, 우리 기업들은 인도 소매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스타벅스는 2012년 8월 인도에 1호점을 개점할 예정이며,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은 합작 또는 도매 분야 우선 진출 등 다양한 전략으로 인도의 본격적인 소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음.

□ 우리 기업으로서 CJ 홈쇼핑이 유일하게 인도 스타 그룹(Star Group)과 합작으로 소매시장에 진출해 있음.

표 4. 인도 소매업 개황

구분	내용
시장규모	연매출액 4,200억 달러(한국의 약 2배)로 2015년 8,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성장률	연 25~30%
구조	전체 시장규모 중 약 90%가 비기업형(unorganized) 시장이며, 기업형(organized) 시장규모는 2012년 약 4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됨

자료: BMI(2012), *India Retail Report*, Quarterly 1.

- 인도 통신규제청(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은 2G 통신사업권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바, 입찰 참여를 통해 인도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인도 통신규제청은 경쟁입찰 정책 및 절차 등을 확정하여 2012년 3월 말 발표할 예정임.

- 인프라채권펀드 등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것임.

□ 인도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약 1조 달러를 인프라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며, 소요재원의 50% 정도를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자본으로 동원할 계획임.

표 4. 최근 인도 주요 산업별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현황

산업분야	주요 내용	현황
소매업	단일 브랜드 소매업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을 51%에서 100%로 전면 개방	승인
	복수 브랜드 소매업 51%까지 개방	검토 중
항공	인도 민간항공사에 대한 외국항공사의 투자를 49%까지 허용	내각 승인 예정
방송	플랫폼에 따라 상이한 디지털 케이블 TV 분야 외국인투자 지분상한 비율을 일괄적으로 74%로 상향 조정	검토 중
금융	모바일 머니 시장 전면 개방	2012년 3월 말 공식 발표 예정
	인프라채권펀드 출범	승인

자료: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 정리.

■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한국은 2011년 기준 대인도 투자국 순위 14위로, 인도 전체 FDI 대비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싱가포르와 일본은 대인도 투자국 순위의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인도 전체 FDI 대비 10.1%와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 국가별 대인도 FDI 유입 순위 현황

순위	국가	FDI 누적 유입액(백만 달러)	비중(%)
1	모리셔스	62,470	39.6
2	싱가포르	15,894	10.1
3	일본	12,029	7.6
4	미국	10,332	6.5
5	영국	9,215	5.8
6	네덜란드	6,772	4.3
7	사이프러스	5,828	3.7
8	독일	4,393	2.8
9	프랑스	2,710	1.7
10	아랍에미리트	2,090	1.3
11	스위스	2,011	1.3
12	이탈리아	1,060	0.7
13	스페인	976	0.6
14	한국	871	0.6
15	케이맨제도	851	0.5
16	홍콩	840	0.5
17	스웨덴	814	0.5
1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749	0.5
19	인도네시아	605	0.4
20	버뮤다	502	0.3

주: 200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누적금액 및 비중임.

자료: 인도 상무부.

■ 대인도 투자진출을 적극 도모하되,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2G 주파수 부정입찰과 관련해 장관은 물론 당시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음.
- 방위산업 관련 부정사건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투자자도 관련 사업 참여를 장기간 제한하는 등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대처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음.
- 또한 인도정부는 2011년 대규모 시위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옴부즈맨(Lokpal) 기구 설치도 추진하고 있음. 